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오늘날의 시각으로 1970년대와 80년대의 학교를 돌아보면 갖가지 진풍경이 많았다.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았던 탓에 학생들에게 기생충이 많았고, 국가는 기생충 박멸을 위하여 '채변 봉투'라고 해서 학생들의 변을 조그만 비닐 봉투에 담아오게 해서 단체로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였다. 지금도 반 학생들에게 서류 하나를 건으려 해도 하루 만에 다 걷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담임선생들이 행정처리 하느라 골머리를 썩긴 하지만, 옛날에 채변 봉투가 다 안 걸혀서 겪었던 선배 교사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당시의 진풍경 중에는 외제 학용품 검사도 있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에는 미국산이 최고인 시절이었다. 'Made in USA'가 쓰여 있는 필기구는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그런 분위기에 철퇴를 가하기 위하여 학교 선생님들은 수시로 학용품 검사를 했고, 미제 학용품을 쓰는 것이 걸리면 애국심이 없는 학생으로 엄청나게 혼이 나야 했다.

왜 학교에서 외제 학용품 검사를 했을까? 이것은 국가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보호무역정책의 일환이었다. 학교의 행정력을 동원해 학생들에게 국산품을 쓰도록 강제한 것이고, 당시의 시대 분위기는 이런 것을 모두 당연하게 여겼다. 물론 이것이 용인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당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점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 보호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핵심적인 논거 중 하나가 유치산업의 보호이다. 유치산업이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걸음마를 하고 있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은 유치산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하게 해서는 안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1947년에 맺어진 국제조약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는 개

발도상국은 예외적으로 보호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과거에 우리 정부가 노골적으로 외국산 제품을 못쓰게 했어도 국제적으로 별로 비난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일에 오늘날 학교에서 외제 학용품을 못쓰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엄청난 경제적 제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호무역이 개발도상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기사는 최고 선진국인 미국이 어떻게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삼성 싫어, 애플 좋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제품에 내려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8일(현지시간)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월 같은 기관이 애플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판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특히 애플 제품에 내린 수입금지 판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 대통령이 198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 행사한 거부권이었던 만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수 언론이 비판했다.

(연합뉴스 2013. 10. 9)

기사의 골자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똑같이 걸린 애플과 삼성 제품에 오바마 대통령이 ITC가 애플에 내린 수입 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삼성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오바마의 결정은 공정한 경쟁 원리를 강조하는 자유무역 원칙을 심대하게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 오바마는 왜 비난을 무릅쓰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선진국의 보호무역은 주로 자국 내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 중에는 자유무역이 국내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어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것이 있다.

자유무역 원리를 훼손한 오바마의 선별적 거부권 행사

〈기사 속 경제〉는 이 달에 선정된 단원 속의 경제개념을
기사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수업의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코너입니다.

가 단기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삼성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고 애플사의 제품은 제한 조치가 없으니 삼성 제품이 안 팔리고 애플의 제품이 많이 팔릴 것이다. 이로 인해 애플과 관계된 미국 내 일자리는 보호가 될 것이고 고용은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자유무역으로 삼성 제품이 애플의 제품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고용은 줄어들게 된다.

Ⅰ 전 세계적 이득을 추구하는 자유무역

그러나 경제를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국가 전체로 보자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겠지만,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들은 수출이 잘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은 보호무역을 채택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은 자유무역을 하면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무역에는 상대방이 있는 법이다. 만약 서로 단물만 먹고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모든 국가들이 나서게 되면 절대로 자유무역은 이뤄질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이 만나게 되면 자유무역의 대원칙을 강조하게 된다. 다음의 기사도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정상이 모인 자리에서 자유무역체제를 발전시키고 보호무역주의에 대하여 대응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나와 있다. 이 같은 경제 대원칙에 부합하는 발언에 이의를 제기할 정상들은 없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되면 자유무역의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자유무역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모일 이유도 없고, 서로가 경제적 협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낼 수도 없다.

그렇지만 대원칙에 합의가 된다고 해서 자유무역이 손

[APEC, 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 다자외교 데뷔무대에서 자유무역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다자외교 데뷔 무대에서 자유무역체제를 역설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 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다자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이란 주제로 선도발언에 나서 "APEC 회원국들이 전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세계 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역내 지역통합 논의의 조화를 강조했다.

(한국일보 2013. 10. 7)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유무역이 좋은 것인지는 다 알지만, 단기적으로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에는 치명타가 된다. 한미FTA를 체결할 당시에 우리나라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많았던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평생 전통적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비교우위가 있는 농사 기술을 익히기도 어렵거니와 비교우위가 있는 다른 산업의 노동력으로 옮겨가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자유무역을 대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입장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국제회의와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유무역을 강조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처럼 자국 회사와 외국 회사에 대하여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결국 경제 이론적으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만, 단기적인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보호무역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이룩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인 것이다. *"click"*

전대원 진건교 교사
amharez@daum.net

